

2010년대를 향한 남북한 통일 국토종합 개발구상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ning in the unified KOREA

목차

- | | |
|------------------|------------------|
| 1. 서론 | 화 전망과 연계구상 |
| 2. 통일 국토계획의 기본방향 | 4. 통일 국토종합 개발 구상 |
| 3. 남북한 인구경제 변 | 5. 결론 |



鄭武鎔*

Chung, Moo Yong

1. 서론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세계는 우리 민족에게 반세기 동안 분단과 대립을 강요했던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의 새 기운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는 비록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당장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도(前途)에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통일기반의 확립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나아가 평화통일에 동참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은 서독사

회의 발전된 삶의 가치의 모습이 동독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데에 있었다. 자유롭고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번영된 우리의 통일국토를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일 것이다.

통일 후 한민족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남과북 사이의 ① 지역개발 수준의 격차 ② 남북지역간 주민의 소득 격차 ③ 남북한의 문화의 이질성. 이러한 3가지 과제 해결 대안을 국토균형개발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다.

종합적인 국토개발 분야에서 지역개발, 도시개발, 도로, 항만, 항공망 형성을 위한 사회간접자

*도시계획기술사, 공학박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안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본시설(SOC)사업, 관광개발, 주택공급, 상하수도 공급시설, 통신·전기시설 등의 단계별 계획과 투자우선순위와 개발의 구상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2. 통일 국토계획의 기본방향

1) 통일 국토구상의 전제조건

○ 남·북한의 4자회담 수용과 북한의 개방개혁 노선으로 서서히 변하는 전제조건은 남북한 교류활성화, 경제사회교류, 남북한 사회경제 통합 등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남·북한 경제 공동체

○ 독일(동·서독)과는 달리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아닌 쌍방간의 자의적 협력에 바탕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이 통일의 대안과 설정의 전제조건으로 상정한다.

② 남·북한 공동 「통일국토 미래상」 수립

○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21세기 통일시대의 국토개발구상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통일국토의 미래상 설정을 위한 남북한이 공동 국토개발 구상을 하는 계획안이 필요하게 될 것인 바 통일 후의 국토개발구상안을 제시한다

2) 국토개발정책방향 검토

(1) 북한의 국토건설 총계획 수립 원칙

○ 국토개발계획의 주요법규는 헌법(1972. 12 개정 공포)과 토지관리규정(1960년) 및 토지법(1977)에 의거 정무원총리와 부총리의 감독하에 노동당의 기본정책과 지시를 받아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개발계획을 작성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북한의 국토개발연구. 1991)

○ 북한도 국토개발 이념목표를 「지역균형개발」에 두고 있다. 이를 달성키 위해서는 ① 공장기업소를 원료산지, 소비자와 접근 ② 전국도 지역간 균형발전 ③ 도시 농촌과의 문화적 격차 해소 ④ 자연환경의 보호 ⑤ 중공업시설 우선 건설원칙은 무산의 철광석 자원 배후공업을 김책, 청진에 철강공업발달, 고원탄천의 무연탄 주원료로한 함흥·홍남에서 화학공업발달 등을 들고 있다.

○ 북한의 국토개발구상 기본전략은 1971년부터 시작한 6개년계획을 기점으로 국토개발은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청진제강, 공작기계, 화학석유공장, 선봉(웅기)의 정유공장(승리화학공장)의 공업도시 건설, 평양-남포지역 공업성장, 자강도와 평안북도 산간지역에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기계공업으로 성장시켰다. 1980년대에는 평양과 남포를 잇는 대도시권 형성과 평성, 사리원, 개성의 연계 성장으로 이 지역 균형개발이란 이념과 도·농간의 격차해소에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3. 남북한 인구 경제변화 전망과 연계구상

1) 인구·경제력 비교

북한의 인구는 1994년에 남한의 1/2수준이나 국토면적은 남한의 1.24배 수준으로 북한인구밀도는 1km²당 190인으로 남한의 451보다는 낮다.

인구성장율은 과거 10년간 북한은 연1.6%, 남한은 연 0.95%로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이고 있어 많게는 -6.7%('92년)부터 -1.7%('94년)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력 비교에서는 통일 한국은 221,600km²의

국토면적으로 세계 192개국 중 78위 안에 들어가고 인구는 68,700천인으로서 12위, 국민총생산은 11위를 접하게 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개국가의 경제력 비교에서와 같이 남한·북한의 위상을 알 수 있다.

南北韓 比較 (1994현재)

구분	남한(A)	북한(B)	B/A
인구(천명)	44,851	23,216	0.52
면적(㎢)	99,314	122,762	1.24
인구밀도(명/㎢)	451.6	189.5	0.42
연평균인구증가율(1985-1995)	0.95%	1.6%	-
지역	특별시:1 광역시:5 도:9	특별시:1 광역시:2 도:9	-

주)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통계청 : 남북한 경제지표, 1995, 통일원

南北韓 比較 (1994현재)

구분	면적(1,000㎢)	인구(100만명)	국민생산(1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달러)
미국	9,385	263.1	6,736.9	25,400
일본	378	125.2	4,592	20,900
중국	9,600	1,201.2	509	2,400
러시아	17,075	148.9	1,120	7,700
통일한국	221.6	68.7	400.5	-
남한	99.2	44.8	379.6	11,000
북한	122.4	23.3	20.9	950

주)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통계청 : 남북한 경제지표, 1995, 통일원

2) 통일 국토 남북한 인구 경제지표변화 전망(2011년)

(1) 인구규모 2011년의 예측

1994년 현재 남한의 인구(44,851천인)는 북한

(23,261천인)보다 1.9배가 많으며 2011년에는 50,271천인이 예측되고 북한의 1994년의 인구(23,261천인)는 통일시점인 2011년에는 28,320천으로 예측되고 있다.

(2) 남·북한지역 경제규모 (2011년)

남·북한 국민총생산액(GNP)은 1994년 불변가격으로 남한은 30,597백억원이 2011년에는 72,836백억원의 규모가 될 것이다. 북한은 2,326백억원(1994)에서 2011년에는 2,787백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국민 1인당 GNP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 현재 북한보다 남한이 9.4배에서 2011년에는 13.3배로 더욱 큰 차이로 전망되고 있다.

남한이 1인당 GNP가 2011년에 가서는 1994년 불변가격으로 14,488천원(약18,000 \$) 수준인 반면에 북한은 1,088천원(1,360 \$)으로 낮은 수준이 예측되고 있다.

(3) 북 → 남한으로 인구가동 예측은 여러 가지

통일 국토 남북한 변화 전망 (2011)

(1994년 불변가격)

구분	단위	남북비교	1994	2001	2011
인구	천인	남한(A)	44,851	46,567	50,271
		북한(B)	23,261	25,704	27,871
		A/B	1.9	1.8	1.8
GDP	10억원	남한(A)	305,970	478,500	728,360
		북한(B)	16,956	22,465	30,348
		A/B	18.0	21.3	24.0
1인당 GDP	천원	남한(A)	6,883	10,276	14,488
		북한(B)	732	874	1,088
		A/B	9.4	11.7	13.3
인구가동 예측	북 → 남 천인		초기 2011~2012(1년)	1,000(초기 1년간 예상)	
			중기 2011~2016(5년)	4,000(년간 80만인 예상)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인구의 현황과

전망(1992)

주) 남한인구는 제주도지역인구 제외임.

변수에 의해서 상정될 수 있으나 통일 후 1년간은 100만인~200만인 정도의 예측이 되고 있으나 최대한 인구이동 억제제를 유도하여야 하며 100만인 정도를 상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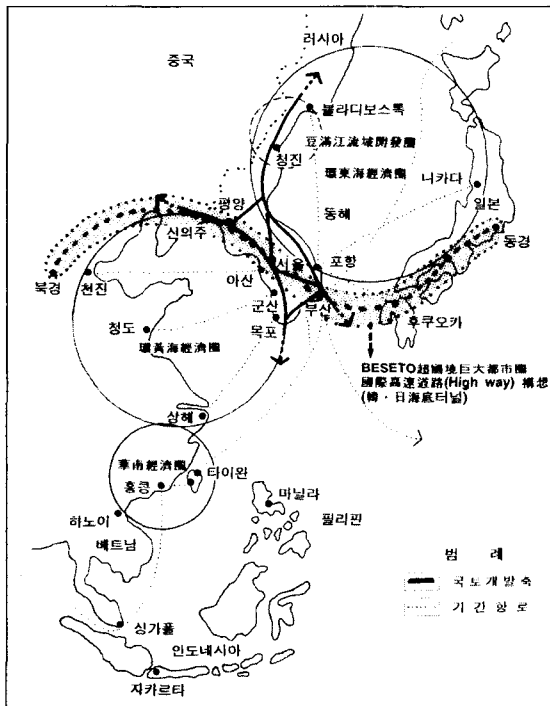
3) 주변국가와 21세기 동북아의 통일 한국

(1) 중심국가로서의 역할

“21세기의 중심이 구미지역에서 동북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다”를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우리의 통일한국(통일국토)은 21세기에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을 「국토종합개발구상」에 반영되는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도래의 새로운 국제환경은 통일의 전국토의 해안선을 U자형으로 동측

우리나라 국토구조와 21세기 동북아 주변국가



단선축의 부산↔동경↔미국연결항로와 남측의 신해양축인 목포-상해-방콕-싱가폴-자카르타-시드니-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항로는 모든 물류기지로서의 활성화 바다해양진출 전략 거점이 될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또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는 지리적 중앙만은 아니고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가 새로운 막을 열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살아져가는 세계변화와 함께 우리의 한반도 통일국가가 되는 순간부터일 것이다.

(2) 주변 경제권과 한반도 연계 개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는 내륙을 이어주는 한반도가 통일이 이룩되어 「통합국토개조」는 농경시대의 가치관이 상공업시대에 맞지 않듯이 상공시대의 국토관이 고도산업사회에서의 정보화시대에 적용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1세기 시대조류에 맞추어 멀티미디어 정보단지 조성, 정보고속도로 건설, 텔레포트,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을 갖춘 정보도시, 부산가덕도 신항만, 광양만 신항만, 북한지역의 나진자유항, 남포항 등의 국제항구도시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철도-평양-신의주-중국으로 가는 구상 등 내륙횡단에서 베세토(BESETO) 축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까지 크게 내다보는 계획과 한편 호남고속철도는(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러시아로 가는 고속철도의 구상은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만강개발계획인 다시말해서 「황금의 삼각주」 두만강 하구의 3개 국가(한반도, 중

국, 러시아) 공동개발의 꿈은 대단한 동북아의 변혁이 이룩될 것이다.

환동해경제권의 주변국의 해안 도시들인 일본의 니카다, 후쿠오카, 한반도의 부산, 울산, 포항, 동해(목호), 원산, 홍남, 김책, 청진, 나진·선봉 도시와 러시아의 포이에토,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야심찬 무역과 경제권의 등장이다.

환동해경제권은 대중국과의 교역과 우리나라의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들간의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된다.

4. 통일 국토종합 개발 구상

1) 통일 국토 종합개발축 골격은 U자형과 X자형 구상

우리의 국토개발전략은 그동안 3차례를 거쳐 30년동안 급속한 공업화 과정 속에서 국토개발을 이룩하였다.

남한은 빈약한 자원과 자본으로 산업화의 고도화만 추진하면서 해양으로 눈돌릴 틈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 국가가 일찍이 착안했어야 할 해양진출기지와 내륙개발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지 못했다.

우리의 국토통합개발 패턴(Pattern)은 해안을 따라서 성장거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U자형 개발방식과 내륙의 X자형 국토개발을 주요개발축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격자형(Grid) 고속도로망 패턴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제안을 계획한다.

국토개발의 X자축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 축과 목포-서울-원산-청진 축을 잇는 국토개발축을 계속유지 발전시킨다.

이는 국토구조를 내륙에서 바다지향적으로 바

꾸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의지가 없이는 신해양축을 모든 수출입물동량의 기지화와 통상강국을 이룩하기 힘들 것이다.

2) 통일 국토개발축

○ 국토골격 개발축

① 3개 해양진출인 환동해축, 환동해축, 환태평양축을 시도한 초기단계는 남북 2개, 동서 4개 축을 주요 골격으로 한 국토개발축을 시도한다.

② X자형 구조와 남한의 八자형 구조 등의 패턴(Pattern)을 유지하면서 U자형의 해양지향적 우리의 장기국토개발구상을 계속 통일 후까지 국토개발전략으로 한다.

3) 통일신수도와 남북인구 이동대비 신도시 구상

○ 신수도(新首都) 입지와 구상 제안

① 임진강과 예성강 연안사이 (개성시의 서남부)인 개풍군 일원과 임진강변의 경기서북부 일원.

② 신수도는 서울을 상정할 수 있겠고 평양도 검토될 수 있으나 서울·평양이 아닌 제3장소를 제안하는 방안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입지선정은 남북한 국민의 정서가 부합되는 설득력 있는 후보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토공간의 중심성, 접근성, 역사성과 미래를 대비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의 중심개발축상으로 부각된 서울-평양간의 중간지점의 후보지가 가장 바람직스럽게 판단되는데 신수도 입지는 강을 낄 수 있는 남으로는 임진강 북으로는 예성강이 있는 개성의 서남부의 위치로 개풍군 일원에 100~200만인 신수도 건설을 제안할 수 있겠다.

국토의 중심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입지한 것

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제2 후보지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철원 북측 일원을 거론할수도 있을 것이다.

4) 통일국토개발은 고속화 도로망을 격자형 패턴 구상 (장기)

(1) 우리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

우리 국토를 선진국의 국토개발부분을 비교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이 낙후된 실정인 바 통일 후의 남·북한을 합치면 더욱더 낙후되는 통계치가 될 것이다.

우리의 도로연장은 1992년 기준 1,000인당 1.4km로 미국의 24.6km에 비교하면 17배나 차이가 난다.

독일의 6.3km라는 4.5배나 일본의 9.0km라는 6배나 격차를 보이고 있어 SOC의 도로사정은 낮은 실정이다.

선진국과의 국토개발 SOC부분 수준 비교

구분	단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비고
① 1천인당 도로연장 (90)	km/천인	24.6	16.2	6.3	9.0	1.4	(92)
② 자동차 1대당인구 (90)	인/대	1.3	2.4	2.1	2.2	8.3	(92)
③ 1천인당 철도연장 (90)	km/천인	1.1	0.7	1.3	0.2	0.1	(93)
④ 1천인당 선박수송능력(90)	t/천인	31.9	40.4	3.1	58.1	12.4	
⑤ 1인당월발전능력 (90)	kwh/인·월	931	465	477	520	228	
⑥ 1백인당전화가입자 (90)	대/백인	50.9	43.4	39.3	42.1	36.7	
⑦ 하수 처리율 (90)	%	73	95	91	-	42.0	
⑧ 상수도 보급율 (90)	%	-	99	98	95	81.6	
⑨ 주택보급율 (90)	%	113.3 (80)	104.8 (84)	100.8 (77)	111.1 (88)	86.1 (96)	

자료 : UN통계년감(1992), 건설부 주요통계자료(1993) 통계청 :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96)

(2) 간선도로망 장기구상안 설정

지금과 같은 도로사정에서 앞으로 4배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을 상정한다면 도로투자를 늘리고

남북축의 도로를 11개축과 동서 15개축으로 구성되는 격자형 고속도로망 건설을 계획하여 통일 후의 남·북한 도로망의 연계성 축상에서 간선도로망 장기구상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기간선도로망(고속화도로)이 건설될 경우에는 지금의 1.4km/천인에서 약 4배 정도가 늘어나서 독일 수준의 1천인당 6km가 될 전망이다.

5) 국토보전·관광지역 조성 구상

(1) 보존과 개발의 조화 :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공원」 화

북한지역은 ① 금강산을 통일 한국의 최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 조성하면서 보전한다.

②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자연환경이 독특하며 유일하게 원시상태가 보전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명산인 바 백두산 관광·보전지역으로 설정한다. 그외의 ③ 개마공원지대 보전지역 ④ 모향산 관광보전지역 ⑤ 언진·마실령산맥의 보전지역 ⑥ 마천령 보전지역 ⑦ 칠보산 관광보전지역 ⑧ 두만강 하구 보전지역을 서정하는 한편 특히 ⑨ 두만강 유역 루트를 백산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권으로 계획하는 방안을 설정한다. ⑩ 압록강 유역 루트에다 관광권역으로 지정하여 국토를 보전한다. 특히 ⑪ 비무장지대(DMZ) 폭 4km 구간이 길이 155마일이 동서로 약 50년간 자연상태로 보전되어온 지대이므로 세계적인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인 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한다.

(2) 금강산과 설악산 자유관광지로 공동개발

남북한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단계부터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로

통일국토종합개발구상(안)



- 남북고속도로망 (11개 노선)
- 1 목포 - 강령 - 신의주
 - 2 안동 - 서울 - 평양 - 인주
 - 3 동두천 - 철수 - 인주
 - 4 미산 - 포천 - 초산
 - 5 평해 - 황해 - 만포
 - 6 부산 - 양구 - 자성
 - 7 부산 - 간성 - 무학사 - 온성
 - 8 신포 - 동주
 - 9 북평 - 원산 - 백두산
 - 10 김책 - 위산
 - 11 영진 - 회령

- 동서고속도로망 (15개 노선)
- 1 신의주 - 온성
 - 2 평주 - 혜산
 - 3 안포 - 용강
 - 4 남포 - 용강
 - 5 개성 - 용강
 - 6 연천 - 용강
 - 7 연천 - 속초
 - 8 양천 - 속초
 - 9 양천 - 강령
 - 10 양천 - 평안
 - 11 양천 - 평안
 - 12 양천 - 평안
 - 13 양천 - 평안
 - 14 양천 - 평안
 - 15 목포 - 부산

Land Developments

개발하여 통일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를 조성한다.
이 「금강산과 설악산 관광자유지역」을 남북한

공동 개발하는 관광지 조성에서 장차 세계 속에
관광자유지대로 선전하며 관광자유국의 통일국토

로 만들 것을 계획한다.

남한지역은 국립공원 전부를 관광 보전지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6) 통일국토 종합개발계획 구상 (제안)

(1) 격자형 고속도로계획 건설 : 남북축 간선도로 1개 노선과 동서축 15개 노선

(2) 통일국토 개발축 : 국토중심개발축 = 평양-개성-서울-대전의 중심개발축

U자형 해양 개발축

X자형 내륙 개발축

(3) 통일 신수도(新首都) 100만~200만 인구 규모 건설 제안 : 국토중심부개발축인 임진강~예성강 사이 개풍군 일원

(4) 통일후 남·북 인구가동 대비 통일 신도시 (50만~100만인 규모) → 평화도시제안 휴전선 국토 중심근처 (철원 북측)

(5) 남·북지역의 수도권인 2개의 정비권역 설정 : 서울·인천 정비권역, 평양남포정비권역

(6) 산업지대·공업지구별 전략개발기지 설정

① 전략개발지역 : 남한지역 10개, 북한지역 10개

② 자유경제무역지대

- 남한지역 1개 지역(경기만 일원의 일부후보지, 혹은 웅진군의 섬)

- 북한지역 1개 지역(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③ 경제특구(자유경제무역지대 동일) : 북한지역 3개지역(청진, 김책, 함흥·홍남지구)

(7) 비무장지대(DMZ) 보전을 위한 생태공원화 계획 : 폭 4km, 길이 155마일

(8) 금강산, 설악산 관광자유지역 공동개발

- 1차적으로 남북한 관광자유화

- 2차적으로 세계 속의 국제적인 No Visa 관

광자유지역화

(9)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부문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개발 기본방안 제시

① 고속철도를 서울-평양-신의주까지 연장하는 남한지역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되어 1일생활권으로 통일국토를 조성

② 고속철도의 전철화-모든 철도를 전철화와 복선화 한다.

③ 항만시설은 첨단물류기지로 전환(18개 전략개발 거점)

④ 「인천국제공항」 개장과 함께 평양의 「순안 국제공항」을 건설 추진한다.

5. 결론

얼마 머지않은 2010년대에는 한민족이 염원했던 통일시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서울~평양간의 통일시대 중심부 개발축에는 거대한 도시권이 형성 즉, 메가로 폴리스(Megapolis)가 형성되어 이 중심부축에 살게되는 2천5백만의 인구는 통일된 우리 민족의 활기찬 생활터전의 모습이 다른 지역보다 통일된 국토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서울에서부터 신수도(개성의 남서부일대 후보지)까지 평양에서 신수도(新首都)까지 출퇴근도 1시간도 안 걸리는 초고속전철을 타고 다닐 것이고 남북이 1일생활권이 될 것이다.

남한지역의 고속도로와 북한지역의 함경도의 온성까지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건설하게 되어 우리의 통일국토 22만km²에 인구 7천5백만인이 풍부한 삶을 누리는 아시아중심국은 물론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되어 우뚝설 것이다.

(원고 접수일 1998. 3. 10)